
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-

2021. 7. 1.



기획재정부

Ministry of Economy
and Finance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	1
II. 재정총량 변화	2
III. 주요 내용	3
1. 추가경정예산안	4
1) 코로나19 피해지원	4
2) 백신·방역 보강	8
3)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	9
4) 지역경제 활성화	16
2. 기정예산 패키지	17

I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① 추진배경: 코로나 피해 · 방역 지원 + 민생 회복 뒷받침

- ①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
 -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추가 지원, 코로나 상생 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, 상생소비지원금 등 추진
- ②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
 -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접종 지원, 선제적 방역 대응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,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필수소요 보장
- ③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일자리,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
 - 지방교부세(금) 등 지방재정 보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

② 기본방향: 추가세수 등을 추경 재원 · 채무 상환에 활용 → 코로나19 대응 및 고용·민생·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- ① (재원) 35조원 (추가세수 31.5 + '20년 세계잉여금 1.7 + 기금재원활용 등 1.8조원)
- ② (추경안) 33조원 (중앙 20.8, 지방교부금 12.2조원)
 - 내용: ①코로나19 피해지원 15.7(국비 13.4), ②백신·방역 4.4, ③고용·민생안정 2.6, ④지역경제 활성화 12.6조원
- ③ (채무상환) 2조원
- ④ (일정) 7.1(목) 임시 국무회의, 7.2(금) 국회제출(잠정)

II. 재정총량 변화

1 총지출 증가율 : 전년대비 +18.0% 증가 (1차 추경 대비 +6.2%p)

○ (총수입) 1차 추경 대비 +31.6조원 증가 (483.0→ 514.6조원)

* '21년 국세수입: (당초) 282.7조원 → (변경) 314.3조원(+31.5조원)

○ (총지출) 1차 추경 대비 +31.8조원* 증가 (572.9→ 604.7조원)

* 추경 규모는 33조원이나 소진기금 집행잔액(△1.1조원) 등 반영

2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차 대비 +0.1%p (△4.5→△4.4%), 국가채무 1차 대비 △1.0%p (48.2→ 47.2%)

○ (통합재정수지) GDP대비 △4.5% → △4.4% (+0.1%p)

* 적자 규모는 △89.9 → △90.1조원으로 변동되나,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 ('21년 당초 4.4→ 변경 5.6%)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은 개선

○ (국가채무) GDP대비 48.2 → 47.2% (△1.0%p)

- 국가채무규모는 965.9 → 963.9조원으로 △2.0조원 감소

(조원, %)						
	'20년		'21년			1차대비 (B-A)
	본예산	4차 추경	본예산	추경		
				1차(A)	2차(B)	
◇ 총 수 입 (증가율)	481.8 (1.2)	470.7 (△1.1)	482.6 (0.2)	483.0 (0.3)	514.6 (6.8)	+31.6
▪ 국세수입 (증가율)	292.0 (△0.9)	279.7 (△5.1)	282.7 (△3.2)	282.7 (△3.2)	314.3 (7.6)	+31.5
◇ 총 지 출 (증가율)	512.3 (9.1)	554.7 (18.1)	558.0 (8.9)	572.9 (11.8)	604.7 (18.0)	+31.8
▪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30.5 (△1.5)	△84.0 (△4.4)	△75.4 (△3.7)	△89.9 (△4.5)	△90.1 (△4.4)	△0.2 (+0.1%p)
▪ 국가채무 (GDP대비,%)	805.2 (39.8)	846.9 (43.9)	956.0 (47.3)	965.9 (48.2)	963.9 (47.2)	△2.0 (△1.0%p)*
※ 국가채무 순증	82.0	123.7	109.1	118.9	116.9	△2.0

* (국가채무 △1.0%p) 추경 순효과 △0.1%p + GDP전망 변경 효과 △0.9%p

Ⅲ. 주요 내용

규모	총 대책규모 36조원 = 추경안 33.0조원 (중앙 20.8, 지방 12.2조원) + 기정예산 3.0조원
추가 경정 예산 (33.0 조원)	① 코로나19 피해지원 (3종 패키지) 15.7조원 [국비 13.4]
	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.9 ▶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(0.6조원) ▶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(3.25조원, 금지·제한 및 경영위기업종)
	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0.4 (국비 8.1)
	②-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.3
	③ 상생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 1.1
	② 백신·방역 보강 4.4조원
	▶ 백신구매, 접종,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
	③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.6조원
	▶ 고용 조기회복 지원 (직접일자리, 직업훈련, 고용안전망 강화 등) 1.1
	▶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(일자리, 창업, 주거, 생활 등) 1.8 ¹⁾
	▶ 문화·예술·관광업계 활력 제고 0.3 ²⁾
	▶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.6 ³⁾
	<small>* 1) 고용대책 중복 0.4, 기정예산 0.5, 2) 고용·청년대책 중복 0.1, 3) 고용·청년대책 중복 등 0.2조원</small>
	④ 지역경제 활성화 12.6조원
	▶ 지역상권·농어가 지원 0.4
	▶ 지방재정 보강 (지방교부세 + 지방교육재정교부금) 12.2
	□ 취약계층 주거·생계부담 등 완화 3.0조원
기정 예산 (3.0 조원)	▶ 청년·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.9
	▶ 취약계층 돌봄·생계·금융부담 완화 2.1

추가경정예산안 [33.0조원]

1

코로나19 피해지원(3종 패키지)

[+15.7조원]
[국비 13.4]

1

소상공인 피해지원

[+3.9조원]

◇ 소상공인의 ①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②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

①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

[+0.6조원]

□ (손실보상 법제화) 「소상공인지원법」 개정('21.6.30일 법사위 의결)에 따라, 7월 이후의 집합금지·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

○ (지원대상)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
소상공인 + α^*

* 손실보상 심의위원회(신설 예정)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

○ (지원금액) 사업소득 감소분* (인건비·임차료 추가반영)

* 방역조치 수준·기간, 신청인의 소득·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○ (재정소요) 0.6조원

* '21년 총 1.2조원 소요 (월 0.2조원 × 6개월('21.7~12월))

→ 정산 소요기간(약 3개월) 감안하여, 7~9월분 0.6조원 반영

** '21.7~9월(3개월) 피해분은 금년 집행, 10~12월(3개월)은 내년 집행

○ (지급절차)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
→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

□ (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) 중충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자제한
업종에 6개월간 月 최대 4만원*(국비·지방비 각 50%) 지원(10만명, 124억원)

* '20년 신규가입자 평균 월부금액 22만원의 약 20% 수준

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[+3.25조원]

- **(목적)**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·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
- **(지원대상)** '20.8월 이후 ①1회라도 집합금지·제한조치를 받거나 ②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·소기업 113만명*
* (금지) 유흥업종 등 20만명, (제한) 음식점 등 76만명, (위기) 여행업 등 17만명
- **(지원기준)** '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
*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'19.年-'20.年, ②'19.上-'20.上, ③'19.下-'20.下, ④'20.上-'21.上, ⑤'20.上-'20.下, ⑥'19.上-'21.上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
- **(지원유형)** ①방역수준, ②방역조치 기간, ③규모, ④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→ 24개로 유형 세분화

① (수준) 집합금지, 영업제한,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

② (기간) 총 46주('20.8.16~'21.6.30일) 중 방역조치 기간*에 따라 장기, 단기로 구분

* 집합금지·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(사업공고시 확정)

③ (규모) '20년 연매출 8,000만원, 2억원,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

* 간이과세 기준(8,000만원), 소상공인 평균매출(2억원),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%(4억원) 감안

④ (업종) 매출감소 △40% 이상(여행업·공연업 등), △20~△40%(전세버스 등)

- **(지원금액)** 최대 900만원 (버팀목플러스+ 대비 +400만원 인상)
- **(재정소요)** 3.25조원

구 분		금액(만원)				사업체 수 (만개)	소요 (조원)
		'20년 매출 4억원 이상	'20년 매출 4억 ~ 2억원	'20년 매출 2억 ~ 8천만원	'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		
집합 금지	장 기	900	700	500	400	10	0.5
	단 기	700	500	400	300	10	0.3
영업 제한	장 기	500	400	300	250	38	1.2
	단 기	400	300	250	200	38	1.0
경영 위기	△40% 이상	300	250	200	150	3.4	0.1
	△20~△40%	250	200	150	100	13.1	0.2
계		900~100				112.5	3.25

- **(지급절차)** 버팀목플러스+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

2
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

[+10.4조원]

[국비 8.1, 지방비 2.3]

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, 新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**중산층을 넓게 포괄**하는 **국민지원금** 지급

- (지원대상)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%
- (지원금액) 1인당 25만원 (4인 가구 기준 100만원)
 - * (1인) 25만원, (2인) 50만원, (3인) 75만원, (4인) 100만원, (5인) 125만원 ~
- (재정소요) 10.4조원 (국비 8.1 + 지방비 2.3)
 - * 보조율 : 서울 70%, 그 외 80%
- (지급방식) 직장·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
→ 온·오프라인 신청시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
- (집행지원) 신청·접수·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·군·구에
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
 - * 7.1일 범부처 공식 TF 출범 (행안부 차관(팀장), 관계부처 1급)

2-1

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

[+0.3조원]

◇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**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** 추가 지급

-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
저소득층 296만명
- (지원금액) 1인당 추가 10만원 (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)
 - * (1인) 10만원, (2인) 20만원, (3인) 30만원, (4인) 40만원, (5인) 50만원 ~
- (재정소요) 0.3조원 (국고 100%)
- (지급방식) 현금 지급

◇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%를 캐시백 환급하는 **상생소비지원금(신용카드 캐시백)** 한시 지원

- (지원내용) '21.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% 이상 증가한 月 카드사용액*에 대해 10%를 캐시백으로 환급

*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 제외

-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30만원 (월별 10만원 한도)

- (재정소요) 1.1조원

- (지급절차)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→ 전담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→ 다음달초 캐시백 지급

※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

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: 15.7조원 】



① 코로나19 백신 구매 · 접종 · 피해보상

[+2.0조원]

- (백신구매) 금년 1억 9,200만회분 확보,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·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(1.5조원)
- (백신접종) 접종 편의성·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(267→282개)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(0.5조원)
- (피해보상)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*,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**(181억원)

*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·장애시 최대 4.4억원 보상

**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치료비 최대 1,000만원 지원

②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

[+2.2조원]

- (방역대응)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(1.3조원)

<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내용 >

 - (진단검사)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
 - (생활지원 등)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 지원
- (의료기관 손실보상)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의료대응체계(치료병상 확보) 유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(0.9조원)

③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

[+0.2조원]

- (백신허브 구축) 백신·원부자재 생산 및 백신제조·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·장비 구축 지원(208억원)
- (임상개발)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 지원(980억원)

- (백신 선구매) 국내백신 개발에 대비한 선구매* 추진(720억원)

*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, 유효성, 성공가능성,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,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

※ '22년 예산에 K-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 추진

3

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

[+2.6조원]

1

고용 조기회복 지원

[+1.1조원]

◇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뒷받침

- ①신규 일자리 창출 16.4만명 + ②SW·조선업 등 인력양성 8.8만명 + ③고용유지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15.3만명

구분	① 신규 일자리 창출	② 직업훈련 · 인력양성	③ 고용 안전망 보완	계
투자규모	0.6조원	0.2조원	0.4조원	1.1조원
지원인원	16.4만명	8.8만명	15.3만명	40.5만명
일자리 창출	16.4만명	-	-	16.4만명

※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고보기금 0.4조원 재정보강

① 신규 일자리 창출

[16.4만명, +0.6조원]

- (목표) ①일자리 조기회복, ②청년고용 촉진, ③백신·방역·안전 수요대응, ④취업취약계층 고용보완의 4대 분야 일자리 창출
- (인원) 총 16.4만명 일자리 창출

※ 분야별 일자리 창출 지원

계	16.4만명	주요 지원사업
일자리 조기회복	3.0만명	•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
청년 고용촉진	3.0만명	• AI·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(1.8만명) • 여행·공연·체육 등 문화 분야 일자리(0.6만명) •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(0.6만명)
백신·방역· 안전 수요 대응	6.7만명	•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(1.2만명) • 공공시설·학교·관광지 방역지원(5.5만명) •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(400명)
취업 취약계층	3.7만명	• 노인·저소득층·장애인 일자리 확대(3.5만명) • 예술인 일자리 지원(0.2만명)

② SW · 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

[8.8만명, +0.2조원]

- (SW 인력) 기업주도형 인력양성모델 확대로 1만명 추가 양성
* '25년까지 8.9만명 추가 양성(기존계획 32.4 + 추가 8.9 = 총 41.3만명 양성)

- (청년 구직자) 기업 주도형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과정(3,000명) 신설 등 K-Digital Training* 확대(2→2.4만명 478억원)
 - * K-Digital Training : 기업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교육훈련
- (재직자) SW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방식(S-OJT*) 신설 지원(4,000명)
 - * S-OJT(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) : 이론 중심의 범용 훈련이 아닌 기업맞춤형 훈련 방식
- (전문인력)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AI 복합교육 과정 확대(5,400 → 5,800명) 및 SW중심대학 5개소(9→14개소) 추가 선정(189억원)
- (조선업) 한시 특별 훈련수당(140만원)을 지급하는 채용연계 교육(600→ 1,200명, +39억원) 및 유급휴가 연계형 특화 훈련* 확대
 - * 경남 시범시행 →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(울산, 부산, 전남 등)로 확대(기정예산 72억원, +2,768명)
- 중소 조선사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* 지원 확충(기금변경 150억원)
 - * 복리후생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지원, 조선업 종사자 +7만명 수혜
- (건설업) 건설업 종사자의 직업능력(용접, 배관 등)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지원인원 확대(0.7→ 0.8만명, 9.8억원)
- (직업훈련) 채용예정자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당 月 20→ 30만원 한시 인상(3,500명)

③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[15.3만명, +0.4조원]

- (고용유지지원금) 항공·여행·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% 특례지원 기간을 6개월→ 9개월로 연장(0.2조원)
- (직업훈련 생계비) 장기 훈련시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 1%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(2,000만원 한도) 확대(2.7→ 3.4만명, 521억원)
- (산재예방) 사고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(1.2→ 1.5만개)하고 안전 컨설팅 업종을 제조업에서 건설업(1만개)까지 추가(407억원)
- (취업취약계층)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(2→ 2.4만명, 44억원)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(1.2→ 2.1만명, 272억원)

2

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

[+1.8조원]

※ 고용대책 중복소요 0.4조원, 기정예산 0.5조원

◇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①일자리, ②창업, ③주거, ④생활·금융 등 4대 분야 중점 지원

① 청년 일자리 지원

[+0.4조원]

※ 고용대책 중복 0.4조원

- (신규일자리) AI 등 신산업분야 및 지역기반 기업의 채용 지원 및 체육·공연·관광·교육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 일자리 확대(+3만명)
 -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하여 실업청년 1.5만명 고용 추진
- (직업훈련) 청년 실무인력 등 SW인력 1만명 추가 양성(755억원)
- (학생취업 지원) 직업계고의 학생 자격증 취득비 50만원(2.4만명, 60억원) 및 미취업 졸업생의 고교 실습보조 지원(580명, 21억원)
 - 전문대 재학·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 70만원 지원(3만명, 215억원)
 - 대학생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4→3~4학년 확대(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)하는 등 대학생 지원인원 2만명 추가(236억원)
- (구직서비스) 부모와 동거시 부모재산이 재산인정액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,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재산요건 3→4억원 이하로 완화

② 역동적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

[+0.6조원]

- (성장단계별 자금공급) 모태펀드·정책융자 등 6,500억원 추가공급
 - 1,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(추경 600억원), 유망분야 창업기업 대상 융자 1.1→1.4조원* 확대(추경 0.3조원)
 - * 만 39세 미만 청년이 창업한 3년 이내 창업 기업 전용자금 500억원 포함
 - 예비유니콘·유니콘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2,500→5,000억원으로 2배 확대(추경 1,000억원)
- (글로벌화)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, 액셀러레이팅 등 맞춤형 지원
 -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 2,000→4,000억원 확충(추경 700억원),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120→140개 팀 확대(13억원)

- (지역창업) 상대적으로 열악한 非수도권 창업생태계 조성
 - 지역 혁신기업, 규제자유특구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 펀드 1,700→ 2,300억원으로 확대(추경 400억원)
 - 지역 고유자원을 소재로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사업화 자금(기업당 3,000만원) 지원대상을 280→ 320개 팀으로 확대(12억원)

구 분 (단위: 억원)	기 존			추 가			합계
	소 계	국비	민간 등	소 계	국비	민간 등	
소 계	1.7조원	(1.3조원)	(0.4조원)	+0.9조원	(0.6조원)	(0.3조원)	2.6조원
① 성장단계별 자금공급	13,500	(12,000)	(1,500)	+6,500	(4,600)	(1,900)	20,000
·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	-	-	-	+1,000	(600)	(400)	1,000
· 창업기반지원자금	11,000	(11,000)	-	+3,000	(3,000)	-	14,000
· 스케일업 펀드	2,500	(1,000)	(1,500)	+2,500	(1,000)	(1,500)	5,000
② 글로벌화	2,075	(825)	(1,250)	+2,013	(713)	(1,300)	4,088
· 글로벌 투자 펀드	2,000	(750)	(1,250)	+2,000	(700)	(1,300)	4,000
· 글로벌 액셀러레이팅	75	(75)	-	+13	(13)	-	88
③ 지역창업 지원	1,788	(688)	(1,100)	+612	(412)	(200)	2,400
· 지역뉴딜 벤처 펀드	1,700	(600)	(1,100)	+600	(400)	(200)	2,300
· 로컬크리에이터	88	(88)	-	+12	(12)	-	100

③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

[+0.7조원]

※ 기정예산 0.4조원

- (전세임대주택) 역세권·대학가 등의 청년이 선호하는 주택 5천호를 추가 확보(1.1→1.6만호)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(0.3조원*)
 - * 추경 2천호(0.3조원) + 기정예산 3천호(0.4조원)
- (전세보증금)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 6개월 연장(21.6→ 12월)
 - * (보증료 인하) 보증금 2억원 이하→ 80% 인하 / 2억원 초과→ 70% 인하

④ 청년 생활·금융 지원

[+0.1조원]

※ 기정예산 0.1조원

- (軍급식) 20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軍급식 제공을 위해 7.1일부터 단가 8,790→ 10,000원으로 13.8% 대폭 인상(기정예산 752억원)
- (청년내일채움공제)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청년-기업-정부 3자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(10→ 12만명, 146억원)
- (햇살론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·대학생에게 3~4%대 저금리 대출 지원하는 햇살론^{youth} 1천억원(2,330→ 3,330억) 확대(기정예산 150억원)

※ 고용·청년대책 중복 0.1조원

◇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·예술·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
 ①일자리, ②공연·예술활동, ③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

[1] 여행·공연·체육업계 일자리 지원 (1.1만명)

[+0.1조원]

- (여행업) 관광업계 실직·휴직자 등을 고용하여 관광지 방역 관리(3천명, 252억원), 중소 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(1,600명, 150억원)
- (공연·예술)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 확대(3.5→ 5.5천명, 115억원),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(2천명, 기금변경 45억원)
- (체육)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추가 고용(1→ 1.2만명, 134억원)

[2]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·예술활동 회복

[+0.04조원]

- (저소득 예술인)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창작준비금(3백만원) 지원대상 9천명 확대(12→ 21천명, 272억원)
- (청년 예술인)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750팀 신규 지원(30억원), 청춘마이크* 400팀 및 연극·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 추가 지원(69억원)

* 문화가 있는 날(매월 마지막 수요일) 청년예술인의 대중음악, 국악, 무용 등 다양한 활동 지원

[3] 문화소비·여가활동 재개 등

[+0.2조원]

- (문화소비) 여가 활동 재개 및 문화업계 회복을 위해 신규 3종, 기존 2종의 쿠폰·바우처 추가 발행(484억원, 소비창출 1,200억원)

구분	①프로스포츠 관람권(신규)	②영화쿠폰 (신규)	③철도·버스 쿠폰(신규)	④체육쿠폰 (확대)	⑤통합문화 이용권(확대)	계
주요내용	축구, 야구, 배구, 농구 관람 50% 할인	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 지원	철도·버스 50% 내외 할인이용권	실내체육시설 월3만원 지원	저소득층의 문화·관광·체육 연10만원 지원	-
지원인원	100만명	167만명	14만명	40만명	20만명	341만명
재정소요	77억원	100억원	42억원	124억원	141억원	484억원
소비효과	150억원	200억원	140억원	520억원	200억원	1,200억원

- (관광기금 재정보강) 관광업계 용자 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국·카지노납부금 등 기금수입이 급감한 관광기금 보강(1,500억원)

※ 고용·청년대책 중복 등 0.2조원

◇ 코로나 피해가 큰 **소상공인** 및 **저소득 취약계층**의 안전망 보강① **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** [+0.3조원]

- (**긴급자금**) ①임차료 대출 3.8조원 한도 확대·보증료 인하(219억원)
+ ②중·저신용 소상공인에 2.2조원 규모 대출·보증 공급(2,474억원)

구 분		지원방법	공급 (억원)	예산 (억원)	대출 조건		
					대출한도	금리	보증료 인하
소 계		-	60,000	2,693			
①임차료	집합금지	소진용자	8,000	가정예산	1→2천만원	1.9%	-
	제한·위기	신보보증	30,000	219		2~3%대	2년간 면제, 3~5년차 △0.2%p
②저신용	금지·제한·위기	소진용자	12,000	2,000	1천만원	1.9→ 1.5%	-
③중저신용	일반업종	지역보증	10,000	474	2천만원	2.3% 내외	1년차 면제, 2~5년차 △0.2%p

- (**폐업 소상공인**)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·현금·컨설팅 지원(559억원)
 -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확대(5→6천억원) 및 보증료 인하*(80억원, 지신보 출연)
 - * (금리) 2.3% 내외, (보증수수료) 당초 1.0% → 변경 0.5% (1년간 △0.5%p 인하)
 -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기한 연장(16→24만명, 406억원), 채무조정(신규)·컨설팅·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(0.65→1만명, 73억원)

② **저소득 취약계층 지원** [+0.3조원]

- (**생계급여**)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당겨('22.1→'21.10월)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제외됐던 4.9만 가구 추가 지원(476억원)
- (**에너지 바우처**)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냉·난방 에너지바우처 18.7만 가구(70.2→88.9) 확대(221억원)
- (**긴급복지**)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'21.6→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(6만가구, 915억원)
- (**자활근로**)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·자립을 위해 자활근로 연장(1.2만명 +2개월) 및 3천명(6.3→6.6만명) 신규 지원(403억원)
- (**노인·장애인 일자리**) 노인일자리 2만개(80→82만명) 지원, 중증장애인 진로설계·인턴 지원 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(2→2.4만명)

【 소상공인 대책 (재도약지원 패키지)】 (21.2차 추경 5.7조원)

① 중층적 피해지원 (3.9조원) : 손실보상 법제화 + 기존 피해 추가지원

- ① (손실보상 법제화) 「소상공인지원법」 개정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·제한 소상공인의 "사업소득 감소분(인건비·임차료 추가반영)" 지원
- ② (희망회복자금) 「소상공인지원법」 개정 이전 방역조치로 인해 직·간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·제한·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"폭 넓고(113만명) 두터운(최대 900만원)" 지원
- ③ (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)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가입장려금(최대 12만원) 국비 지원

※ (집합금지 혜택 예시)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+ 새희망자금 200 + 버팀목자금 300 + 버팀목플러스+ 500 + 희망회복자금 900 + 손실보상 법제화 = 최대 2,050만원 + α

② 긴급자금 (0.3조원) : 정책자금 공급(6조원 수준)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

- ① (임차료 용자) 저금리(소진용자 1.9%, 신보 보증 2~3%대) 임차료 대출(3.8조원 규모)의 지원한도 상향(1→ 2천만원) 및 지원대상 확대(집합금지·제한→ 경영위기업종 추가)
- ② (금지·제한·경영위기) 대출절벽에 놓인 저신용 집합금지·제한·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 초저금리(1.5%) 대출(1.2조원 규모) + 최초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유예
- ③ (일반업종) 중·저신용 등급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의 지신보 특례보증(금리 2.3% 수준, 1조원 규모) 공급 + 1년차 보증수수료(△0.8%p) 면제

③ 매출회복 (1.5조원) : 캐시백 등 지역상권 온기 회복 (소비창출 18조원 규모)

- ① (상생소비지원금 1.1조원 +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+ 온누리상품권 0.3조원) 지역상권·생활밀착형 소비* 유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 뒷받침

*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

- ② (소비쿠폰·바우처) 문화·체육·관광 업종과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 분야 소비쿠폰·바우처 5종과 농·축·수산물 소비쿠폰 발행(+0.6조원)

④ 구조전환 (0.06조원) : 폐업 소상공인 대상 금융·현금·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

- ① (금융) 소상공인이 폐업시에도 기존 사업자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규모 확대(0.5→ 0.6조원) 및 보증수수료 절반 감면(1.0→0.5%)
- ② (현금)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('21.8→ 12월)
- ③ (컨설팅 등) 폐업 컨설팅 신청시 파산·개인회생 관련 전문 법률자문(신규), 점포철거비(최대 200만원) 등 원스톱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(0.65→1만명)

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·온누리상품권, 농·축·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및 12조원 수준 지방재정 보강 추진

① 지역상권 · 농어가 지원

[+0.4조원]

- (지역상권 회복)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5.3조원(18→ 23.3조원) 추가 발행* (0.24조원)
 - * (지역사랑상품권) 15 → 20조원(+5조원), (온누리상품권) 3 → 3.3조원(+0.3조원)
- 방역상황 안정화에 맞춰 추석 연휴(9월말),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(11월초) 등 기간에 10% 할인 판매 물량 확대
- (농어가 지원)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·축·수산물 소비쿠폰 1,100억원* 발행(소비창출 5,500억원)
 - * (농축산물 소비쿠폰) 900억원, (수산물 소비쿠폰) 200억원
- ※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4+4 소비 쿠폰·바우처(0.5조원, 소비창출 2조원)의 하반기 단계적 재개도 병행

② 지방재정 보강

[+12.2조원]

- 지방교부세(금) +12.2조원 보강(지자체 5.9, 지방교육청 6.3)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
 - * 추가세수로 인한 교부세(금)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유도 (예: 지자체→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 지원 / 교육청→ 교육격차 해소 등 지원)

구 분	'21예산(A)	추경(B)	합계(A+B)
■ 지방교부세*	51.7조원	5.9조원	57.6조원
■ 지방교육재정교부금**	53.3조원	6.3조원	59.6조원

* 내국세의 19.24%

** 내국세의 20.79% + 교육세 일부

기정예산 패키지 [3.0조원]

① 청년·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

[+0.9조원]

- (디딤돌 대출)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2→ 2.5억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층의 '내 집 마련' 지원 강화(기정예산 1,010억원)
- (공공전세) 시세 90% 이하의 공공전세주택 2천호를 중형 평형(60~85 m^2) 위주로 공급 확대(기금변경 3,550억원)
- (전세임대주택) LH 등이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3천호 추가공급(기정예산 4,275억원)
- (전세보증금)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 6개월 연장(21.6→ 12월)
* (보증료 인하) 보증금 2억원 이하 → 80% 인하 / 2억원 초과 → 70% 인하

② 취약계층 돌봄·생계·금융부담 완화

[+2.1조원]

- (돌봄)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 등 소외계층의 돌봄 부담 경감(77억원)
 - (장애아동)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양육지원 확대(2→ 3천명, 연 720→ 840시간)
 - (취약계층) 저소득층 청소년부모·조손가족 6천가구 아이돌봄비용 자부담 5%p 완화
- (생계) 수산물 비축 확대(300억원), 중소식품기업 원료 구입자금 융자(100억원)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(639억원)
- (금융)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근로자 햇살론* 2,700억원 및 햇살론^{youth}** 1,000억원 공급(480억원)
 - * 근로자 햇살론 : 연소득 4,500만원 & 신용 6등급 이하 근로자에게 8~10%대 중금리 지원
 - ** 햇살론 youth :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3~4%대 금리 지원
-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한도를 1→ 2천만원 확대(0.8조원), 저신용 소상공인(금지·제한·위기) 대출금리 인하(1.9%→ 1.5%, 1조원)
- (軍급식) 7.1일부터 급식단가 8,790→ 10,000원 인상(752억원)